

광주시-나주시, 'SRF 갈등' 골 깊어간다

광주 "시민 세금 헛되지 않게..." 나주 "광주쓰레기 광주서 처리" 손실보전 범위에 광주 시설 포함 여부 놓고 감정싸움 양상

나주 고흥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가 정면으로 맞서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여부는 운영 주체인 한국 지역난방공사와 허가권자인 나주시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합법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조치를 하고 시민 세금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실보전 범위에 난방공사는 광주 SRF를 생산하는 청정 빛고을을 주축회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광주 쓰레기 처리를 위한 회사로, 광주시와 난방공사가 주요 주주인 청정 빛고을의 손실은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난방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빚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광주 SRF로 겪는 나주시민의 고통을 생각하고 손실보전 협상 추진을 위해서라도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 "애국된 부분이 많다"며 반박자료로 맞서고 있다. 현재 열병합 발전소 가동 무산으로 생긴 손실액이 9000여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3400억원이 광주 쓰레기를 SRF로 만드는 청정 빛고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광주 쓰레기를 이용해 청정 빛고을에서 만든 SRF를 열병합 발전소에 반입시켜 연료로 만들어야 하지만 나주 지역민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열병합 발전소 손실보전 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에 있는 시설의 손실액까지 더해져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했다는 게 나주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포스코건설 주도로 설립된 청정 빛고을과 난방공사가 맺은 합법적인 계약에 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난방공사는 전남권에서 생산된 SRF 연료가 부족해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환경부의 국내 연료 사용 권고로 광주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게 됐다"며 "나주시가 만일 광주 SRF 반입에 반대했다면 2700억원이 들

어간 발전소 건립을 사전 행정절차부터 반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계획 초기부터 나주시가 광주 SRF 반입에 반대했다면 다른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해서라도 나주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광주 SRF를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또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 달라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와 의료폐기물 처리를 사례로 들어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13개소 중 광주-전남에 각각 1개소씩 있는데, 나주시 의료 폐기물 90% 이상이 광주에서 소각되고 있다"면서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서울시 및 경기도 48개 지자체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 있다. 지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YMCA 100주년 기념 전시회

광주역사민속박물관 14일~12월 13일까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광주YMCA 100주년을 기념해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영남, 광주를 움직이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제1부 '100년의 역사, 미래를 열다'는 3·1운동의 경험을 되살려 1920년 최홍종 목사 등의 주도로 광주YMCA를 창설한 과정과 의의, 당시 청년 운동의 산실인 광

주YMCA 회관의 변화 등을 사진 자료로 소개한다. 제2부 '민족운동의 기틀이 되다'는 1920~1930년대 광주YMCA의 교육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제3부 '도시에서 농촌으로'에서는 광주YMCA가 일제의 수탈로 폐쇄된 농민의 삶에 눈을 돌려 농촌 계몽 운동에 앞장섰던 이야기를 소개한다. 제4부 '시민운동과 지역 발전'에서는 개발 독재의 시기에 광주YMCA가 펼친 민주화운동을 다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12만 가구 대상 올 인구 주택 총조사

15일~다음달 18일까지

광주시는 "국가 기본 통계이자 각종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2020 인구주택 총조사(인구 센서스)'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통계청에서 주관해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인구 주택 총조사는 1925년부터 5년마다 진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전체 가구가 아닌 20%(광주 12만 가구)만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1월 1일 기준 광주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이다. 기간은 11월 18일까지며, 이번 달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조사한다. 방문 조사 기간에도 응답자가 희망하면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인구, 가구, 주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사 방식을 기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까지 확대했다. 대상 가구는 사전에 발송된 안내문의 정보(QR코드)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조사를 응할 수 있다. 전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콜센터 기능도 확충했다. 조사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사한다. 방문 조사 기간에도 응답자가 희망하면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인구, 가구, 주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여수 여천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천동·선원동 일원 553개 필지

전남도가 여수시 여천동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여수시 여천동 및 선원동 일원 0.36km² 규모 553개 필지로,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025년 10월 12일까지며,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 지정·공고 됐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100㎡를 초과한 녹지지역 토지 및 90㎡ 초과한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행위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여수시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예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 추진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며 "실수요자의 정상거래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0. 10. 12.(월) 전남도, 현대삼호중공업, 전남테크노파크
 조선힬양산업 상생 협약식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일 오후 영암군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전남 조선힬양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원장, 김 지사,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 송하철 대불산학융합원장.

조선·해양산업 친환경·스마트 기술 지원

전남도·삼호중·대불산학융합원 등 조선·해양산업 '상생협력' 협약

전남도는 12일 현대삼호중공업의 기술력과 대불산학융합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조선·해양 중소기업에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지원키로 한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가진 협약식

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송하철 대불산학융합원장과 중소조선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은 IoT(사물인터넷) 기반 생산공정 개선을 비롯 검사장비 지원, 용접기술 지도 및 용접장비 개발 지원, 친환경 선박의 설계 및 건조기술 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협력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 대불산학융

합원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친환경·스마트산업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전남도내 조선·해양 중소기업은 장비 개발, 작업 공정 효율화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협약식에 앞서 현대삼호중공업의 LNG선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여수해역 적조주의보 발령...총력 대응

양식장 피해 최소화 예찰 강화

전남도가 최근 여수 지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총력 대응에 나섰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여수시 돌산읍 성두리에서 경남 통영시 수우도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

적조주의보는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 m/당 100개체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1일부터 성두리 해역 주변 양식장 등에 대한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일 예찰에 들어갔으며, 적조 상황관리와 특보발령 시 기동대응반 및 방제활동 지원 등을 위해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조주의보 발령 상황과 양식장 관리요령을 돌산 해역 양식사업인 1333명에게 신속히 전파했으며, 전남해양수산과학원도 예찰 활동 강화를 조치했다.

여수시는 액화산소 등 방제장비 가동

및 구제물질인 황토산포를 준비해 적조피해 돌산 해역으로 유입 시 조동 방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수지역 해역은 지난 9월 예비주의보 해제 이후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수온이 23℃ 내외로 유지돼 적조생물 성장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제14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에 따른 강풍으로 인해 여수 인근 경남 남해군 상주면·삼동면 해역에서 코클로디니움이 최대 300개체/m²가 발생돼 적조가 확산중이며, 주변 해역으로 급격한 확산이 우려돼 여수 돌산 일원이 적조주의보 발령 해역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에 2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 7월부터 적조 준비기간을 운영해 양식 어장별 방제장비(9540개) 및 황토확보(6400t) 상황을 점검했으며, 해양환경정화선 5척(125t급)에 대해 적조발생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또 가두리 임시대피지(안전해역) 6개소 69ha를 지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히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